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2022. 8.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 **종합감사 시기 도래**(직전 감사 2019.5월 실시)
- 한국금융연구원의 고유사업, 예산집행, 인력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감사기간: 2022. 7. 4(월) ~ 7. 8(금), 5일간(근무일 기준)

□ 감사요원: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금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종전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① 연구윤리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11.28.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기로 하였고
 - 표절검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 2019년~2021년 연구위원들의 연구윤리 교육 평균 이수율은 71%임
-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부정행위 방지가 중요하므로, 연구위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연구위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② 채용 지원자와 동일부서 근무 심사위원 미제척

- 금융연구원은 2019. 10. 1.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인턴직원 A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하였으며, 2020. 10. 1. 인턴 계약기간이 만료된 A를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하였음
- A의 초빙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A가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소속인 선임연구위원 B와 연구원 C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B와 C는 A에게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음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채용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③ 별정직 직원 채용시 각서 징구 관행 개선 필요

- 금융연구원은 별정직 직원 채용 시에 “채직 중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충당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일괄적으로 징구받고 있음
- 「별정직원운용요령」 제8조(제출서류) 및 별지 제1호(서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서약서와 상기 각서는 형식과 내용이 상이하여 각서 징구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서약서와 비교할 때 손해의 유형에 대한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대상자에게 더욱 불리한 것으로 보이고,
 - 회계·재무 담당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연구원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퇴직위로금 손해 충당 각서를 징구받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별정직원 채용 시 퇴직위로금 손해 충당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대신 「별정직원운용요령」에 규정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업무행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④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마련 필요

- 금융연구원 「인사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인사위원회는 인사 제도,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정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임에도 의결

정족수 관련 사항이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 성격임을 고려하여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내규의 명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⑤ 연구직·일반직의 가산금 지급 투명성 제고 필요

□ 금융연구원은 연구직에 대해 「연봉제 보수규정」 제3조제5호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장려금은 평가등급제 및 평가점수제에 따른 평가금액, 가산금으로 구성됨

○ 이 중 2019년 금융위 감사에서 가산금 관련 지급 투명성 제고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가칭)가산금 지급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마련(2021.9.11.)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 위원회 구성원 중 원장·부원장 이외의 자(연구조정실장, 기획협력실장, 각 연구실장)는 평가대상자에 해당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등으로 실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가산금 등급에 대한 기준 없이 가산금이 책정되었음

□ 한편, 「연봉제 보수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일반직 직원의 업무성과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급별 지급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가산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부재하며, 분기별 가산금 기준금액, 등급비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임의적으로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가산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 가산금 기준금액, 등급비율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⑥ 총회 대리참석시 위임장 미징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사원의 가입승인, 사업계획, 예·결산 승인, 임원·비상임이사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있고
 - 사원의 대표권은 사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음 (정관 제9조(사원의 대표권))
- 사원 대표자의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원 대표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해야 함에도
 - 2020년 제5차 총회에서는 A은행이, 2021년 제4차 총회에서는 B은행, C은행이 대리참석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음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총회 대리참석시 사원 대표자의 위임장 사전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⑦ 시재금 감사 철저 및 금융사고 예방

-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예금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직원의 횡령 예방을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잔액증명 직접 발급 등의 방법으로 시재금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 시재금 감사 실시 현황 >

년도	정기감사	수시감사	실시횟수
2019년	매월말 (12회)	04.09, 07.18, 10.22 (3회)	15회
2020년	매월말 (12회)	01.28, 05.18, 08.26, 11.18 (4회)	16회
2021년	매월말 (12회)	03.15, 07.15, 10.18 (3회)	15회
2022년 4월까지	매월말 (4회)	01.26, 04.26 (2회)	6회

- 또한, 금융연구원은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사업장*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 외부감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은행 예금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시재금 감사를 철저히 한 업무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모범사례))

⑧ 자체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폐기 지양 필요

- 한국금융연구원은 각 연구위원별로 1년 동안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를 연간 1건 이상씩 수행토록 하고 있음
 - 2019년~2021년 중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받은 자체연구과제는 총 102건으로, 이중 완료는 55건(53.9%), 진행중 15건(14.7%), 폐기는 32건(31.4%)이고
 - 이 중 폐기 과제를 보면, 연구기간(연도) 내 폐기는 21건(65.6%), 연구기간(연도) 종료 후 폐기는 11건(34.4%)임

<자체연구과제 수행 내역>

연도	총 과제수	완료	진행	폐기	
				연구기간 내 폐기	연구기간 종료 후 폐기
2019	32	14	1	11	6
2020	34	21	6	5	2
2021	36	20	8	5	3
계	102	55	15	21	11

- 연구기간 종료 후 폐기한 11건의 사유를 보면, 금융환경 변화로 주제 시의성 상실 4건, 자료수집의 어려움 3건, 타 연구과제로 대체 2건, 진행 부진 등 기타 2건으로
 -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기간 내 조기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주제·연구범위·연구방법 등의 변경을 추진하는 등 승인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종료 후 폐기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자체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폐기 문제”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보다 충실한 금융정책 연구를 위한 목적과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극행정면책을 함 (적극행정면책)